

부산 고용안정센터 방문

(성취 프로그램 운영실 방문 중)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걱정과 우려를 말하곤 했는데 노동부로부터 모범 케이스로 보고하는 걸 받은 곳이 이곳 부산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소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부산 것을 배우고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공시켜 고용 지원서비스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포함해 훈련하고 있는데, 한국은 보건, 복지 등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 하던 것을 지시한다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어서, 계속 지시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정부가 크냐, 적으냐 지금 시비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서비스 부문이 적으니까 상담도 하고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이렇게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고용 지원 서비스 자체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원 서비스 지원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자리입니다. 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가 어렵고 작년까지만 해도 파탄위기가 나오고 해서 정부가 돈 쓰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엔)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완벽하게 짜려고 합니다.

(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실 방문 중)

국정브리핑에 들어가면 고용지원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립니다. 취업 애로 글도 있고, 이명숙 상담원인 것 같은데, 며칠 전 광주에서 상담 과정, 취업 애로에 속상해 하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취업 지원이 어느 정도 과정에 있는지 궁금했는데 부산에 와서 보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4년 보고받고, 2005년부터 전국에 이 모델 그대로 확산시켜 왔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적 성과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제 읽은 글 중에서 지역 할당제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댁에는 노력하는데,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수원쯤까지 내려왔는데 여러분에게 혜택이 아직 없습니다. 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70개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고, 그러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리사업 등 별도 예산으로 지방을 지원하고, 산업혁신 클러스트 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주십시오. 정부로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원 여러분은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스스로도 불안해 하니까 걱정했

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어떻게 알겠는가 하겠지만 테이블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니 짐작하겠습니다. 나도 청와대에서 우리 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고용센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면 하루아침에 나올 프로그램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험을 토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고급 프로그램입니다. 열심히 해서 취직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영세자영업 문제 모두 고용문제와 연관

오늘 여러분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정책 수립과 추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용지원 서비스의 실제 수준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업 훈련 상태도 좀 정확하게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폴리텍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제가 미처 간과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방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지방 얘기가 주된 얘기처럼 돼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주제가 매우 확장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방 문제는 추후 다른 곳에서 다른 계기를 통해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특히 이제 지방이니까 지방 대학이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문제도 다른 계기에 노력을 하기로 하고 주로 고용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제를 넓혀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직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경제력 요소이기 때문에 경제의 잠재 성장력이라든지 장기적인 경쟁력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 활력에 걸리는 문제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들어갔다, 그 거품 꺼질 때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자리는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잘 하시듯이 흔히 말하는 영세 자영업이라는 것이 약 30%,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세 자영업이 지금 전부 공급과잉이 돼서 과다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과다 경쟁이 그전부터 있어 왔지만 전체적인 경제의 구조조정 때문에 항상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그 과잉 공급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지난 번 외환위기 때 생긴 것 아닙니까? 외환위기 거치면서 자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올 때, 고용은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 얘기를 할 때 부동산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되니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고용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공단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도 다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은 지방의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지방 얘기를 하는데 균형 발전 시작할 때, 그 개념은 지방의 경쟁력으로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중앙에서 다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지방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능성과 현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놓고 경쟁해서 돈을 받아가는 쪽으로 해보자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이 그전부터 자기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고 무조건 예산 지원 이야기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추상적인 원론적인 프로그램 제목만 내놓고 이거 하는데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 정부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런 돈을 주면 이런 이런 사업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야 돈을 주는 건데, 제목만 딱 던지고 돈 내달라 합니다. 지방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산도 이점에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산은 전국 제2의 도시인데 적어도 부산만은 중앙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어떻다, 즉 공단에 관한 문제도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여기 지정해라 이렇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그렇게 해서 공단 만듭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프로그램 달라고 할 때 나는 이점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 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지식인들이든 또는 소위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지역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갖고 중앙 정부하고 교섭해야지, 그런 프로그램은 지역에도 안 한다 말이지요. 오죽하면 지역 혁신 협의회 같은 것을 중앙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혁신 협의회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혁신 협의회 잘 돌아가면 거기서 만들어 낸 대로 지원해 드리겠다. 혁신 협의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서 부산에다 뭐, 중앙 정부에다 뭐 해 달라”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더라도 내가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자고 하면 지방 스스로 인적자원의 부족을 얘기 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입니다. 국제상사를 비롯해서 럭키 금성 등 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옮겨간 기업들입니다. 그때는 가게 돼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지 않고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본사 내려 보내 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본사 내려가라고 명령하면 내려갑니까? 그래서 안 되는 얘기는 지역사회에서도 다 물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되는 얘기만 합시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들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지방의 체력만 소모하는 일만 하지 말고, 지방 스스로 만들어서 되는 사업들만 하자라는 것이고, 되는 것은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계획이면 다른 지역에서 왜 당신 고향에 뭐 주냐 소리 듣더라도 하겠습니다. 계획서 내놓고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 하면 얼마든지 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방 대학이 어렵다, 취직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부산의 인적자원이 없으면 기업이 부산에 올 리가 없지요. 닭과 달걀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와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 할 수 있는 자원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리하다 할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어떤 기관이 내려오는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는 여성 대학생이 시집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레벨을 맞추면 남자가 반듯한 직장 있는 사람이라야 상대가 되는 것인데 광주에 그럴 만한 직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전력 내려가면 이제 신랑감들 올 거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들 내려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지역 자체의 노력, 그것이 결정적이다” 저는 그 얘기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지원은 우선순위의 정책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지원센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5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03년부터 국가의 고용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2004년 상반기에 제가 부산 고용지원센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산시키자고 얘기했는데, 그 동안 또 노동부도 준비하느라 미처 안 되고 있어서 2005년 상반기에는 내가 노동부의 책임자들을 보고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때는 아마 6개 정도로 더 확산하는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냈었지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런 센터를 한 6개 정도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시하기 이전부터 만든 가장 모범적인 센터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 생각인데, 부산 지방청 차원에서 했던 상당히 창의적인 사업 아니었을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하나 안 하나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부산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의 모델이 되는 곳이고. 여기서 성공하면 6개도 성공하고 또 6개가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대단히 밀도 높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정책의 순위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산을 다 자르더라도 고용지원 서비스만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타당성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타당성 있는 실행 계획이 전제됐을 때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업 훈련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은 좀 폭넓게 있고 대학 교육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단지 취업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대학은 그 나름대로 또 대학의 역할이고. 적어도 노동부에서는 직업 능력 향상,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만들어서 취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것은 노동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정책보다 더 우선해서 먼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직업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

그리고 크게 보면, 총체적으로 그 국민의 직업 능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조건들이 다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국 기업들 유치할 때도 한국의 기업들 유치할 때도 한국의 인재들의 역량 가지고 유치하는 것이고 무슨 규제 완화하고 세금 낮춰주고 별 일을 다 해도 우수한 일꾼 없으면 기업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저런 규제가, 환경 규제나 규제가 많고 심지어 미국 같은 곳은 9.11테러 이후에 입국 심사 하나부터 참 모욕적으로 하고 복잡한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도 꾸역꾸역 갑니다. 볼 일 있으면 가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할 수 있으면 가는 것인데. 다른 어떤 규제니 조세니 혜택보다 장사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사람입니다. 인력 좋으나 노동력이 수준이 좋으나 그것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만일 노동력만 확실한 경쟁력이 있으면 다른 규제 같은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목소리가 높으니까 규제 얘기가 먼저 나오지만 인재 양성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경쟁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가 서비스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업 상담원에 대해서 법이 뒷

받침을 못 한다고 하는데, 자질과 전문성의 향상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체제상 문제가 있으면 공단을 만들든지 해서 확실하게 안정된 일자리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보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용 사정이나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인력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임시직하고 계약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만 나중에 연세가 더 들었을 때 군대처럼 피라미드 조직이 된다는 것 할 때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연세 많을수록 더 잘 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그렇게 한번 만듭시다. 인력 늘려야 되는 부분도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한꺼번에 마구 충원하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로,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서비스 전체의 확대도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 경험을 쌓은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 사람들이 조직으로 확산돼 나가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도 확대하고 인력도 그 만큼 그 속도로 늘려나가는 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2천 명씩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내실 있게 늘려갔으면 좋겠고 다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좀 더 노력할 수 있게 확실하게 조직적으로 신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 오래

생각을 하던 차인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장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방침대로 가십시오. 결정적인 장애 사유가 발견되면 다시 그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아웃소싱이 근래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아웃소싱이 효율적이다 하여 민영화를 해라 이러는데, 이것 역시 민간 부문에 맡길 부분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간 부문의 책임성이 적어도 국가 부문만큼, 말하자면 특수한 몇몇 좋은 사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면전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간지럽기는 하지만 이명숙 상담원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민영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무원이 이런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 쪽 안내를 받으면서 몇 분들 상담하는 모습도 보고 설명 듣고 했습니다만 그 정도이면 민영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민영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분도 보장돼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따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이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면 민영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요.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은 확실하게 서비스를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쓰이는 것도, 비교해 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5분의 1도 채 안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매우 빈약합니다. 예산 투입하는 것도 빈약하니까 충분히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가고, 민영화 부분은 또 그렇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까 정부의 서비스를 종합해 달라는 우리 유 교수님 말씀도 있고요. 그런

데 속도 문제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해 나가는 공무원들의 숫자도 역시 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든 정책이 시간이 걸리고 지금 고용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 부분에도 대통령은 계속 장관들 만나면 지방 우선 중소기업 우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각기 합니다.

통합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 통합 조정의 기제 때문에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정비 문제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문제하고 이런 지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챙기고 업무들을 분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속도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니까 조금씩 늦을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많이 쓸수록 국가적 노동력 품질 낮아져

그런데 민간 기업 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에 아주 곧게 자란 나무가 울창해야 언제든지 집 짓고 싶을 때 가서 도끼만 들고, 요새는 전기 톱 들고 가서 그냥 나무 베어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을 씁니다. 안 쓰거나 비정규직을 쓰니까 교육 훈련하고도 관심이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점차 직장에서도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자꾸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에서는 우선 내 쓸 사람 쓰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 정규직으로 쓰고 바깥에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면, 결국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점차 소모되고 고갈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총 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동력이 점차 품질이 낮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어디 설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크게 보고 상생 협력

이라고 제가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중소기업한테 돈 주란 말이나 모호하게 전달되고 그러는데 저는 공정하게 게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게임해 달라는 것이고, 판을 크게 보고 좀 멀리 내다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부 노동력을 고갈시키는, 능력을 고갈시켜 나가는 이런 고용 정책 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쯤 가면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직장도 제대로 없고,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면서 직업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낮은 품질의 노동자들만 있을 텐데, 그 토양 위에서 기업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가서 물어볼 일이지는 합시다만. 지방에서는 저것 그것 지금 가릴 형편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균형 발전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공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보고 함께 협력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모범적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

오늘 부산 얘기를 아까 하다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오늘 창원 와보고 부산 와보고 이러는데 창원도 잘 하고 있고 부산 와 보고 저는 굉장히 안드하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서울 올라갈 생각입니다. 당장 거기서 몇 사람 상담하는 것 보고 뭘 알겠냐 하는데 저도 업무 처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업무 전체가 정비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하면서 쓰는 모습을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개발이 돼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전부 반영해서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보면서 업무가 그렇게 정비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모두들 표정에서 열의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

니겠지만, 만족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수준 가지고 가면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 만나더라도 “우리도 합니다. 그것 우리도 벌써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준 아닙니까. 여기 교육훈련 부분이 제대로 받쳐 가면 말입니다.

이상수 장관이 조금 복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노동부가 나한테 세계 깨질 거라고, 보면 눈에 걸리면 하여튼 내가 박살낼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는데 이만큼 갔으니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산 센터에 와서 밥도 자주 사고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

그리고 광주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주에 이명숙 씨 때문에 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덧글' 아닙니다. '덧글'이라고 하니깐 내가 조선일보한테 맨날 꾸중 듣고 이릅니다. 대통령이 덧글이나 달고 있다고. 그래서 덧글이 아니고 메시지로, 그 특수 메일을 하거든요. 지금은 메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숙 씨한테도 제가 두 번쯤 메일을 보낸 기억이... 세 번입니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글을 참 잘 써요. 국정브리핑 들어가 보시면 아주 눈에 띄는 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사정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 절실한 사람들의 얘기를 아주 절실하게 쓰고 그런데 그것이 절실하게 걱정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러면서도 보람과 희망을 항상 한 꼭지씩 달아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뭐 해 달라고 하셨죠? 하여튼 처우 개선해라 이 말씀이죠? 이 장관이 돈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돈을 올려주든지 신분을 확정시켜 주든지 두 개 다 해주든지, 두 개 다 해 주면 좋고 아니면 신분 보장 쪽이 먼저인 것 같고, 그렇죠? 자기 직장도 튼튼하지 않은 사람이 남 상담한다는 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선 6개 부문하는 것을 장관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것 할랍니다. 장관께서 직접 점검해 보시고 부산 수준 가져다 하면, 제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여기에 접속되는 사람들을 다시 전부 재훈련 과정에 다 어떻게든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갑시다.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자영업이 30% 되는 수준에서는 아무리 훈련 받아도 일자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창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중소기업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몇 개나 모여 있고, 그런 것하고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 받으면 상담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역시 우리 정부 정책 사이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그전보다 수입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확대하고 있는데 하나 걱정인 것이 그 사람 잘 되면 옆에 누군가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외식업 하는 사람들 시장은 뻥한데, 옆집 잘 되면 우리 집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노동자로 보고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포섭해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탈출시키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일자리 많이 내니깐 중소기업 육성하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직업 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은 모두 맞물려 있는 과제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시비할 것 없이, 어떤든 국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노인들 수발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 돌봐주는, 아이들 돌보는 문제 그런 일자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자리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나오는 것입니

다. 결국 내수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도 그 부분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기업만 잘 살면 경제는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양극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수가 죽고, 내수 죽으면 수요가 줄어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각기 자기 주장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 과정과 직업 능력 향상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이런 것이 내수를 일으키는 요건 아니겠습니까. 내수를 어떻게는 키워내서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일들은 이 장관한테 다 맡기고, 나머지 정책들로 또 일자리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장관들과 열심히 해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박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방 문제에 대해서요. 지방 문제, 대학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돈도 달라고 하지 않을 텐데 타박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건 타박 드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도 하여튼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꼭 이 문제는 극복돼야 됩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위원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획 짜가지고 돈 내라고 구체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중앙 정부 돈은 내려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분 있는 사업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명분 있는 경우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서 어디 사업 만들어라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부산에서 봐주셔서 꼭 좀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란 개인에게는 행복의 조건, 직업 능력은 국가에게 있어서 경쟁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